

WTO 체제 출범과 양돈 생산비 절감



김재철
(본회 강원도협의회장)

UR협상 타결과 WTO출범은 양돈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계에 커다란 변화의 회오리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도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는 곧 외국과의 무한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면 국제사회에서 탈락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도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량의 자급이다. 식량의 자급없이는 완전한 독립국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GNP 10,000불 근처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보여 곡류와 육류의 비율이 50 : 50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 주위의 시장을 조사해 보면, 대형 슈퍼의 경우 곡류, 육류, 잡화등 생필품의 1/3을 육류가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양돈농가들은 국민들에게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산에 임하여야 하겠다.

더우기 돼지고기가 육류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식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생산비 절감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농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3월 8일자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이 생각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농어촌 발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영세율 적용 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 인하여 축산기자재 50종이 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월 중순에는 부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해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점차적인 대책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UR 대책의 입장에서는 일부 농가, 일부 기자재만 국한해서는 전체 양돈생산비 절감은 경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은 전기업 농가를 포함해 전체 양축농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양축자금도 20년 장기 상환 또는 연리 3% 저리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994년 각국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육기준으로 미국이 30kg, 덴마크 71.6kg, 한국 18.6kg이다. 미국의 돼지고기를 수입할 경우 90kg 기준 국내 시판 가격은 109,800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육돈의 세부내역은 생산비 64,800원, 미국 생산 농민의 출하가격 71,300원, 미국 돈육 국내 도착가격 99,800원, 관세 25%, 수송잡비 15%, 합 28,500원, 국내 시장 거래 109,800원이다.

따라서 미국산 돈육의 국내 도착가격이 110,000원 정도이므로 우리 돈육 생산비는 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료 및 생산 기자재 전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업형 사료 공급을 농민 단체가 직접 임가공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약 16% 이상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

둘째, 축산 지원 자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기간을 더 늘려 주어야 한다. 모든 농업이 현대화 하듯 축산업도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수익성은 매우 낮아 융자금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축산업에 지원되는 각 자금의 금리를 외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특히 축산의 자금은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융자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야 한다. 약 2,000두를 사육하는 농장이면 정책자금과 일반 융자를 합해 2억원 이상의 대출을 생각할 수 있다. 2,000두 사육 농가면 연간 출하두수는 3,000두가 될 것이다. 이자와 십년 장기상환과 단기 금리를 합하면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상

환해야 한다. 출하돼지 1두당 1만원씩 원리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융자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20년 상환으로 되어야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노임 비교는 생산비대 미국 11.7%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6.5% 사실상 액면차액은 미국의 2배 이상이 되므로 시설 개선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셋째, 분뇨 처리시설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어서 서구식으로 분뇨 처리는 불가능하고 일본처럼 정수,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양돈은 전업 또는 기업화함으로써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필자는 분뇨처리를 인분처럼 군단위로 종합종말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축산분뇨를 분리하여 노는 정수 또는 액비화하고, 분은 유기질 비료 공장을 설치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화학비료로 산성화된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 공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한다.

패적인 농촌을 위하여 강원도 철원군은 이 사업을 착수하였다. 그리고 경북 군위군 축협이 군내에 돼지 2만두 규모의 분뇨처리 공장을 설치하여 농가별로 계약하여 공동 비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저장탱크만 설치하면 환경에 대하여서는 비료 공장과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하여서는 배출시설을 환경과에서 인정한다. 공동처리로 생산비를 4% 절감할 수 있다.

넷째로 농축물 유통개선의 문제다. 직배 센터는 일본의 농촌에서 시작하여 농산물의 유통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협 중앙회에서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최소한 군 단위로 설치하여 농수축협이 일체화 되어 모든 농축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신용직배를 원칙으로 유통시켜야 한다.